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3조 중 “10분의 1의 범위”를 “100분의 5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명(제19조 제1호 관련)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 한일우호관
- 비슬산자연휴양림 및 화원자연휴양림
- 하천구역내(하빈지구) 체육시설물
- 금호강 고수부지내 체육시설물
- 화원명곡체육공원
- 달성종합스포츠파크(달성국민체육센터, 현풍전천후 게이트볼장)
- 공공체육시설(화원게이트볼장, 군민운동장,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군민체육관)
- 공원관리(성서5차, 테크노폴리스)
- 달성문화센터
- 사문진 역사공원
- 달성강변야구장
- 동네체육시설
- 화원동산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_____ _____ _____ _____ __ 100분의 5의 범위_____ _____.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파견은 정원의 5%이내에서 한시적 운영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2.30 조례 제22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체 발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기획감사실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추천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임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이사회에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별표 1의 시설 관리 및 운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

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세입)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 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의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제28조(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군의회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를장을 포함한 임원은 군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군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61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군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군수가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당시 군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3억원으로 한다.

제5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공단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둔다.

제7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개정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내용 개선(안 제2조제1항)

-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 추가

나.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관할대상 개선 (안 제3조제2항)

- 관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포함

5.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개정<개정 2011.7.29>사항
에 미반영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자 하는 것으로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공직자 윤리법 제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제1항에 의한
(안 제2조제1항)에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추가하였고
 - (안 제3조제2항)에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할대상을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포함하는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제고와
공직윤리를 확대·강화하여 새로운 100달성의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기틀의 초석을 다지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
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풍부한 자중에서”를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u>풍부한 자중에서</u> 위촉한다.</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3조(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p>1. ~ 2. (생략)</p> <p><u><신설></u></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1. _____ _____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_____.</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붙임 3)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의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의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09.2.3.]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정) 1983. 8. 14 조례 제1476호
(일부개정) 1998. 8. 31 조례 제167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2. 1. 18 조례 제178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12.30 조례 제205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문개정) 2012.10.30 조례 제22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제3항에 따른 업무 취업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

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 제7호, 제12호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을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8호, 제9호, 제12호의 단서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19) 생략

부칙(조례 제2204호, 201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3. 개정이유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하던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자녀의 입영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허가하던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10일 이내,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 미사용시 30일 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3조제14항)
- 나. 자녀의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 할 경우 1일의 휴가 부여 규정 신설(안 제24조제16항)
- 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3일에서 1일로 개정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안 별표 3)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중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하던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자녀의 군 입영시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므로 다시 뛰는 100년 달성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제2조에 따라
 - (안 제23조제1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안 제1호)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 (안 제2호)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 (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고
 - (안 제23조제16항)에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3조제1항)[별표 3]중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3일에서 1일로 개정하는 등 장기재직 직원의 사기진작과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 해당사항 없음

-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제23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며, “1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4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제23조제1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기재직휴가는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제15항 중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11.12.30)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복무선서) ① (생략) ② 제1항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 5. (생략)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 10. (생략)	제22조(공가)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 그 밖에 ————— 따른 ————— ————— 2. ————— 그 밖에 ————— 3. 법률에 따라 ————— 4. ~ 5. (현행과 같음) 6. ————— 제29조에 따른 ————— 7. —————, 그 밖에 ————— ————— 8.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 ————— 따른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따른 ————— ————— ————— —————.

현행	개정안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⑪ ----- ----- ----- 따른 ----- ----- -----.
⑫ ~ ⑬ (생략)	⑫ ~ ⑬ (현행과 같음)
⑭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5 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⑭ ----- 10년 이상 -----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신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
<신설>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1. ~ 3. (생략)	3. ~ 5. (현행 제1호, 제2호, 제3호와 각각 같음)
4. 장기재직휴가는 2차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삭제>
<신설>	6. 장기재직휴가는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⑮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⑮ 법 제66조에 따른 ----- ----- ----- ----- -----.
<신설>	⑯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7.15.]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전문개정) 1985. 11. 1 조례 제1018호
(일부개정) 1987. 12. 30 조례 제1088호
(일부개정) 1988. 10. 10 조례 제1172호
(일부개정) 1989. 2. 2 조례 제1242호
(일부개정) 1989. 4. 12 조례 제1266호
(일부개정) 1994. 7. 14 조례 제1498호
(일부개정) 1996. 1. 30 조례 제1577호
(일부개정) 1997. 3. 10 조례 제1605호
(일부개정) 2000. 3. 10 조례 제1703호
(일부개정) 2001. 12. 10 조례 제1780호
(일부개정) 2002. 5. 20 조례 제1793호
(일부개정) 2004. 1. 1 조례 제1831호
(일부개정) 2004. 7. 23 조례 제1886호
(일부개정) 2005. 12. 30 조례 제1925호
(일부개정) 2006.10.04 조례 제1950호
(일부개정) 2008.11.10 조례 제2043호
(일부개정) 2011.12.30 조례 제2178호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226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조(복무선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 제1항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책임완수) ㉠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0)

제6조(근검·절약)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30)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1. 30, 개정 2013.12.30)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1. 1, 개정 2013.12.30)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1. 1)

제8조(출장공무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30)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나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30)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10조(파견근무) ㉠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30)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30, 개정 2013.12.3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사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개정 2011.12.30)

제 2 장 근무시간 등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1.12.30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1.12.30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1.12.30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1.12.30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2005.12.30)

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23)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 월 이 상	3 일
6 월 이 상	6일
1 년 이 상	9일
2 년 이 상	12일
3 년 이 상	14일
4 년 이 상	17일
5 년 이 상	20일
6 년 이 상	21일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3. 10, 개정 2013.12.30)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3.12.30)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신설 1997. 3. 10, 개정 2013.12.30)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조 신설 2011.12.3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30)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 3. 10)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1. 30, 개정 2013.12.30)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신설2005.12.30)(후단 신설 2011.12.30) (개정 2013.12.3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 1. 30, 2011.12.30)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 3. 10, 개정 2013.12.30)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 3. 10, 개정 2013.12.30)

④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 5. 20, 개정 2013.12.30)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12월 X 당해연도 연가일수

제21조(병가) ㉠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3. 10, 개정 2013.12.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3.12.30)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개정 2001. 12. 10, 2011.12.30)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6. 1. 30)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 3. 10)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1.12.30)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신설 2011.12.30)

제23조(특별휴가) ㉞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1.12.30, 개정 2013.12.30)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0, 개정 2013.12.30)

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3.10, 2005.12.30, 2013.12.30)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 3. 10)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⑥삭제<2005.12.30>

⑦삭제<2005.12.30>

⑧삭제<2005.12.30>

⑨삭제<2005.12.30>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 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3. 10)

⑪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항 신설 2011.12.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예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항 신설 2011.12.30)

⑬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항 신설 2013.12.30)

⑭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항 신설 2013.12.30)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최초임용일 기준으로 제18조제2항에 의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의 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자는 자신이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의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군의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휴가허가사실을 기록하고, 군의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4. 장기재직휴가는 2차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⑮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항 신설 2013.12.30)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삭제 2011.12.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 2(국외여행)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89. 4. 12, 개정 2013.12.30)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 삭제 2011.12.30

제27조(검직허가) ▣ 삭제 2011.12.30

제28조(공무원의 범위) ▣ 법 제3조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신설2005.12.30)

제29조(정치적 행위) ▣ 삭제 2011.12.30

제30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2. 30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10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2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12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14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30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10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0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0 조례 제1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2조(출산휴가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 20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1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3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조례 제19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0.4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0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7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62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개정이유

-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지자체 간 자동차세 신고업무 대행 등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납세자의 담보제공 예외 사유 명확화(안 제24조제4호 신설)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신청할 때 납세자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추가
- 다.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변경(안 제39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개정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제8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8조제2항
-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
- 지방세 기본 조례 개정(안)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기본 조례」 개정안[행정자치부 지방세 제도개선과-1234(2015. 1.21)]에 의거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2 신설) 지자체 간 자동차세 신고업무 대행 등 근거 마련하였고
 - (안 제47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 정비하려는 것으로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

-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관련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호 중 “사유로 납기연장이나”를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기연장을 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 직무 대행에 대해서는 영 제108조에 따른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시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 중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을 “심사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호 중 “질병 기타”를 “질병 및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5조의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p> <p>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관련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p> <p>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p> <p>2. ~ 3. (생략)</p> <p><u><신 설></u></p>	<p>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p> <p>1. _____ 사유로 _____</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영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기연장을 하는 경우</p>
<p>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_____ _____ 1개월간 _____.</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신설></p>	<p>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직무 대행에 대해서는 영 제108조에 따른다.</p>
<p>제48조(위원회 회의 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p>	<p>제48조(위원회 회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시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51조(위원의 해촉)(생략)</p> <p>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p> <p>2. ~ 4. (생략)</p>	<p>제51조(위원의 해촉)(현행과 같음)</p> <p>1. 질병 및 그 밖의 -----</p> <p>2. ~ 4. (현행과 같음)</p>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

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 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1호·제2호·제4 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 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 기본 조례 개정(안)

「지방세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정) 2010.12.30 조례 제2124호

(일부개정) 2014.04.30 조례 제22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4.30)

제3조(적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군세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에는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군세 중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1조제1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2장 부과징수

-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군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군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 납세의무 취소 통지)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체납군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시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시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군수가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군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군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금고업무 대행회사 등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9조(군세환급금의 총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세환급금을 총당한 경우 납부일은 총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세환급금을 총당하는 때의 총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군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른 군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군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0)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 ② 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년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

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군세확정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를 때부터 해질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읍면의 공무원 중 2인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인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군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군수는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의 계속수입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4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채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채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채납된 군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 나. 군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채납처분비·가산금·군세 및 채권액에 총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채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채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채산의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에 총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총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채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중지기간중 군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채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채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군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군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생계획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구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군세 채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채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군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군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채납액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군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군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채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군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279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955호, 2014.12.31.)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축소하며, 문화재 보호시설구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축소(안 제3조)

- 현행 면제 ⇒ 2016.12.31.까지 100분의 75 면제,
2017.1.1.부터 2018.12.31.까지 100분의 50 면제

나.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4조)

다. 인용법령 변경(안 제12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55조제2항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955호, 2014. 12.31.)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축소하고, 문화재보호시설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군세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을 현행 100% 면제에서 2016.12.31.까지 100분의 75를 면제하고 2017. 1. 1.부터 2018.12.31.까지 100분의 50으로 단계별로 면제 비율을 축소하며
 -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원안통과/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경감(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경감)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100분의 50 경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
2.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u>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u>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경감(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경감)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100분의 50 경감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u>「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u></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 2.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

현행	개정안
<p>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1. ∼ 2. (생략)</p>	<p>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

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 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감면 조례

(전문개정) 2006.12.29 조례 제1969호
 (일부개정) 2007. 5. 31 조례 제1986호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2001호
 (일부개정) 2008.12.30 조례 제2047호
 (일부개정) 2009.05.29 조례 제2069호
 (일부개정) 2009.07.03 조례 제2076호
 (전문개정) 2009.12.30 조례 제2089호
 (일부개정) 2010.03.10 조례 제2099호
 (전문개정) 2010.12.30 조례 제2126호
 (일부개정) 2011.06.10 조례 제2145호
 (전문개정) 2012.05.10 조례 제2188호
 (일부개정) 2014.04.30 조례 제2281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3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 자동차가 매도 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옥포 농공단지

2. 구지 농공단지

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 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10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다만,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 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1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운영규정에 따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

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4.4.30)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 (개정 2014.4.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개정 2014.4.30)
 2.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개정 2014.4.30)
- 보칙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30)

제1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4.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7.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5.29 조례 제206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7.3 조례 제2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6조의 2(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2.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3.10 조례 제209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5조의2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145호, 201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88호, 2012.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281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307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회계과)

3.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내용 수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주민 수를 고려하여 청사의 면적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청사의 기준 면적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가능한 조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 수정

나. 청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청사 면적 기준을 **【별표1】**로 정함(제47조제1항)

다. **【별표1】**은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건물, 군수 집무실의 경우에 적용함(제47조제2항)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9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가 2015. 2.16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안 제47조제1항)에는 청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청사 면적 기준을 【별표1】로 정하고(163쪽 참조)
 - (안 제47조제2항)은 【별표1】에 따라 본청청사 및 의회청사, 본청청사 및 의회청사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건물, 군수 집무실의 경우에 적용하고자 함이며
 - (안 제5조제2항)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등 일부 법령 용어를 시대에 맞게 순화코자하는 것으로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 해당사항 없으며
-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 4) 현행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7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바목과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과 같은 호 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과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바목의

“의하여”를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의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에 따라 해당”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1】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2.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건물
3. 군수 집무실

제5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6조제3호와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6호의 단서 중 “1급 내지”를 각각 “1급 및”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6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사의 면적기준(제47조 제1항 관련)

구 분	면적(㎡)	비 고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	13,582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및 주차시설 면적,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및 군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	1,996	
군수 집무실 기준면적	99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 문화·복지·체육시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은 해당되지 않음.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생략)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 4.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제7조제3항에 ----- ----- 2. -----에 따른 ----- ----- 3. ~ 4.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따라 ----- ----- ----- ----- -----.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④ (생략)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라 ----- ----- ----- 따라 ----- -----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 -----

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
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
업등” 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
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
의 100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
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
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
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
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
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
부하는 경우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
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 그 밖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

-----에 따른 -----

1.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해당 -----
-----.

2. -----에 따라 -----

3. -----
-----에 따라 -----

4. (현행과 같음)

5. ----- 제3조제1호부터 제
3호까지 -----
-----에 따라 -----

<p><u>규정에 의하여</u>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u>당해</u>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생략)</p> <p>1.(생략)</p> <p>가. ~ 마. (생략)</p> <p>바.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사.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u>의하여</u>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아. ~ 자. (생략)</p> <p>2. (생략)</p> <p>가. ~ 라. (생략)</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u>의하여</u>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사. ~ 아. (생략)</p> <p>3. (생략)</p> <p>가. ~ 라. (생략)</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p>	<p>-----</p> <p>6. -----</p> <p>-----</p> <p>----- <u>해당</u> -----</p> <p>-----</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에</u> -----</p> <p>-----</p> <p>사. <u>가목부터 마목까지에</u> -----</p> <p>-----</p> <p>----- <u>따라</u> -----</p> <p>-----</p> <p>아. ~ 자.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p> <p>-----</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p> <p>-----</p> <p>----- <u>따라</u> -----</p> <p>-----</p> <p>사. ~ 아.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p> <p>-----</p>
---	---

<p>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u>의하여</u>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사. <u>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u>에 해당하는 경우</p> <p>아. (생략)</p> <p>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u>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p> <p>② ~ ③ (생략)</p> <p>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한</u>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u>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u>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9조 (조성원가 매각) <u>영 제42조에 의하여</u>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p>	<p>-----</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p> <p>-----</p> <p>----- 따라 -----</p> <p>-----</p> <p>사. <u>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u> -----</p> <p>-----</p> <p>아. (현행과 같음)</p> <p>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에 따라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에 따른 -----</p> <p>-----</p> <p>-----.</p> <p>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p> <p>-----에 따라 해당-----</p> <p>-----</p> <p>-----</p> <p>-----</p> <p>-----.</p> <p>제39조 (조성원가 매각) -----</p> <p>따라 -----</p>
---	--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략)

제40조 (주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3천제곱미터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6. ~ 7. (생략)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 기구 · 인력의 증 · 감등 장 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 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총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 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 구역을 설정

_____.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 (주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_____ 따른 _____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 해당 -----

6. ~ 7.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 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1】**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2.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건물

3. 군수 집무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 부군수, 국장·단장 및 실·과·소장 등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생략)
6. 전화요금(단, 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 8.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

제50조(정의) _____

_____ 그 밖의 _____
_____.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1급 및 _____)
4. _____

(-, 1급 및 _____)
5. (현행과 같음)
6. _____(-, 1급 및 _____)
7. ~ 8.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_____
_____에 따른 _____
_____ 해당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_____ 따른 _____

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 초과 할 수 없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해당

붙임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3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2.16.>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특 별 시		127,402㎡
광 역 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특별자치시		35,38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9,098m ²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20,214m ²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m ²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m ²
군	인구 3만명 미만		7,525m ²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8,385m ²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9,406m ²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1,829m ²
	인구 15만명 이상		13,582m ²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6,368m ²
		인구 50만명 이상	27,484m ²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1,861m ²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m ²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m ²
		인구 50만명 이상	18,206m ²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15.2.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	165.3m ²	132m ²	99m ²	99m ²	99m ²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15.2.16.>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특 별 시		24,930m ²
광 역 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11,054m ²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7,291m ²
	인구 200만명 미만	5,174m ²
특별자치시		4,889m ²
도	경기도	29,164m ²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12,700m ²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11,524m ²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9,878m ²
특별자치도		8,467m ²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85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2,257㎡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351㎡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4,713㎡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4,851㎡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6,209㎡	
	인구 100만명 이상	6,597㎡	
군	인구 3만명 미만	1,358㎡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506㎡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1,787㎡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830㎡	
	인구 15만명 이상	1,996㎡	
자 치 구	특별시의	인구 50만명 미만	2,961㎡
	자치구	인구 50만명 이상	4,172㎡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358㎡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698㎡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58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